

코스피	코스닥
2486.64	716.12
(-1.78)	(+0.67)
금리 (미국 9년)	환율
2.330	1424.70
(-0.001)	(+5.60)

삼성디스플레이
‘올레드 패널’
애플에 독점 공급
03



‘트럼프 스톱’에 허리띠 켜 기업들

사업축소·임금삭감 투자 보다 ‘체질 개선’

미국과 중국의 무역갈등이 심화되면서 국내 기업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국내 기업들은 ‘트럼프 스톱’을 비롯한 글로벌 경기침체 장기화 국면에서 생존하기 위해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고 있다. 현재 글로벌 경제는 미·중 간 무역 갈등에 따른 위기감마저 확산되고 있다. 특히 두 강대국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하는 한국 기업들의 대외 불확실성이 현실화되는 분위기다. 대미 수출은 큰 폭으로 하락했으며 가성비를 앞세운 중국 기업의 한국 시장 공략으로 수익성에도 적신호가 켜졌다.

트럼프 관세 리스크+정치 불안
韓 수출 5% ↓… 무역적자 전환
주요 10대 품목 중 9개 모두 감소

포스코·현대제철 구조조정 속도
삼성·SK 등 비즈니스석도 제한

22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기업들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관세정책 불확실성 등에 대응하기 위해 체질 개선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직격탄을 맞은 철강업계는 비상경영에 돌입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달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했다. 이후 지난달 대미 철강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10% 넘게 감소했다. 문제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과 함께 중국산 철강업체의 저가공세로 내수시장이 붕괴되면서 국내 업체들의 피해는 커지고 있다.

이에 포스코그룹은 장인하 회장 취임 이후 사업 재편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포스코 그룹은 수소사업 투자를 축소하는 한편 현재 그룹의 주력 사업인 철강과 이차전지 사업의 부진을 넘어서기 위해 비핵심 자산을 속여내고 일부 사업은 축소하거나 계획을 연기하는 등 사업 전략에 변화를 주고 있다. 생존을 위한 장기화 전략을 준비하면서 무리한 투자 확대보다는 내실을 다지며 기회를 노리겠다는 전략이다.



현대차 울산공장 수출선적부두

/현대차

국내 철강업계 2위 현대제철은 지난 3월 14일부터 비상경영에 돌입했다. 최근 수요 위축 등에 따른 인천공장 철강 생산라인 셧다운에 이어, 전 임원 급여 20% 삭감 등을 진행했다. 철강공장의 전체 생산라인을 전면적으로 멈춘 건 창사 이래 최초다. 여기에 만 50세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지난 18일 까지 희망 퇴직도 진행했다.

앞서 삼성전자는 네트워크 등 일부 사업부 임원들에게 해외 출장 시 비즈니스 대신 이코노미석을 이용하고 숙소도 평상원과 같은 등급으로 제공하도록 했다. SK그룹 배터리 계열사인 SK온 역시 임원 출장 시 이코노미석을 예약하도록 방침을 정했다.

주요 대기업들이 일제히 경영 허리띠를 졸라댄 것은 지난해 12월초 비상경영 이후 국내 정치적 불안이 지속되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 출범 후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 실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이후 우리나라 수출은 곤두박질치고 있다. 이달 들어 20일까지 우리 수출 실적을 보면 수출액은 339억달러를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5.2%(18억 7000만달러) 줄었다. 이 기간 조업일수는 15.5일로 1년 전과 같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부각되고 있다.

주요 10대 수출 품목별로 보면 반도체(10.7%) 외에 승용차(-6.5%), 철강제품(-8.7%), 석유제품(-22.0%), 자동차부품(-1.7%) 등 나머지 9개 품목은 모두 감소했다. 반도체는 아직 미국의 관세 부과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품목이다.

국가별로는 미국향 수출이 14.3% 줄어 감소세가 두드러졌다. 중국(-3.4%), 베트남(-0.2%) 등으로의 수출도 줄었다. 유럽연합(EU·13.8%), 대만(22.0%) 등은 늘었다. 이 기간 수입액은 340억달러로 11.8%(45억 7000만달러) 줄었다. 수입액이 수출액을 웃돌면서 무역수지는 1억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최태원 “EU처럼 韓日 경제협력 강화해야”

〈대한상의 회장〉

국회 미래산업포럼 발족식

“고급두뇌 유치로 내수확대 필요
규제보다 파격적 인센티브 부여”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국회 의원들을 만난 자리에서 “한국경제와 비슷한 일본시장을 키워야 한다”며 일본과의 협력 필요성을 밝혔다. 또 특정 지역에서 규제를 파격적으로 완화하는 ‘스페셜존’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최태원 회장은 22일 국회 사랑채에서 열린 국회 ‘미래산업포럼’ 발족식에서 기초연설을 통해 수출중심 성장모델 한계 극복을 위한 3가지 제언을 했다.

최 회장은 먼저 한국과 일본경제에 대해 “룰테이커(rule-taker·규칙 추종자)이고 저출생, 저성장엔 별다른 해법이 없다는 점에서 동병상련”이라며 “또한 LNG 공동구매와 탄소포집 활용,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분야 등에서 협력의 이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미국이나 중국 등은 규모로 봤을 때 흡수·합병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어 경제적 협력을 통해 이익이 생길 지 장담할 수 없다”며 “독일, 프랑스 등이 협력한 EU가 건재한데 한일 협력이 강화되면 아시아 다른 국가를 더 늘리는 방식으로 EU정도 사이즈를 만들어 룰을 강요받지 않는 위치까지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미래산업포럼 발족식에서 최근 한국경제의 도전 과제와 대응 방향 주제로 기초연설을 하고 있다. /손진영 기자 son@

오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 회장은 고급두뇌 유치를 통한 내수확대의 필요성도 지적했다. 일정 규모 이상의 고급인재들이 국내에 유입되면 소비와 세입이 증가해 경제성장은 물론, 산업경쟁력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국경이 상대적으로 느슨한 ‘소프트머니’ 창출도 언급하며 전략적 해외 투자와 지식재산권 수출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이를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 방법도 제시했다. 그는 “기업이 원하는 규제를 해당 지역에서만 풀고 AI 인프라를 구축해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며, 메가 샌드박스 지역에서의 학업이 곧 일자리인 스페셜 존을 만들

자는 것”이라며 “세계에서 시행한 적은 없지만 1석다조의 해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간주도의 사회문제 해결 방식도 있어 기업이 사회문제에 동참하도록 측정해 보상하고 시장을 만들어야 하고 규제보다는 인센티브를 통해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최 회장은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30년만에 우리의 수출액은 5.5배 늘 등 성장의 밑거름이 됐지만 ‘상품’ 수출중심 성장 모델은 큰 위협을 받고 있다”며 “‘상품’ 수출중심 성장 모델이 큰 위협을 받고 있어 공급망 분절, 트럼프 관세 등의 글로벌 질서 변화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승용 기자 lsy2665@

美 금리동결 관측에 韓 금리인하 ‘신중론’

물가·고용에 美 금리 동결 유력
韓 인하 땀 금리차 커져 자금유출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상반기 금리를 동결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우리나라도 당장 금리인하가 쉽지 않다는 분석이다. 오는 5월 금리를 인하하면 한·미 간 금리차가 커져 원화 가치 하락과 함께 외국인 자금유출을 부추길 수 있어서다.

22일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Fed Watch)에 따르면 뉴욕 금리 선물 시장의 90.9%는 연준이 오는 5월 6~7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내다봤다. 미국의 기준금리는 현재 4.25~4.50%다.

◆물가 목표치 상회… 금리동결 무게
시장에서 미 기준금리 동결에 무게를 싣는 이유는 물가 목표치(2%)에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연준이 물가지표로 삼고 있는 개인소비지출지수(PCI)는 2월 기준 2.5%로 1월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다. 목표치(2%)에 도달하

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물가 상승 요인도 존재한다.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수입산에 관세를 부과하면서 상대국들도 보복관세를 예고한 상태다. 미국에서 제품을 수입해 판매하는 기업들은 늘어난 비용 부담을 제품가격에 전가할 수밖에 없다. 미국도 물가상승에 직면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일자리도 증가 추세다. 농축산업을 제외한 비농업고용지수는 3월 기준 22만 8000명으로 한달 전과 비교해 7만 7000명 늘었다. 앞서 1월과 2월은 각각 14만 3000명, 15만 1000명으로 예상치를 밑돌았다. 고용인구가 늘면 기업들은 인건비를 제품가격에 반영해 물가상승 압박으로 작용한다. 물가 흐름을 보기 위해 인하시기를 늦출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과 일자리 증가에 따른 물가상승이 서서히 반영돼 6월까지 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내비친 상호관세를 90일 유예한 상태다. 90일 내 협상을 통해 관세가 부

과되는 만큼 물가상승에 따른 금리인하 속도가 늦춰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韓 금리인하 시… 한·미 금리차 2%

미국이 금리를 동결한 상태에서 우리나라가 금리를 0.25%포인트(p) 내릴 경우 한·미간 금리차는 또다시 2%p까지 벌어진다.

앞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주 현 2.75%인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이날 이창용 한은 총재는 “올해 성장률이 지난 2월 전망치(1.5%)를 하회할 것”이라며 “금통위원 6명 전원 3개월 내 기준금리를 연 2.75%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하할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5월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

다만, 금리를 인하하면 원화 가치 하락과 함께 외국인 자금 유출 등을 부추길 수 있다. 지난달 외국인 주식 투자자금은 11억 6000만달러 순유출 됐다. 지난해 8월부터 8개월 연속 감소세다. 위험회피 심리로 주식투자자금이 또다시 유출될 수 있다는 의미다.

/나유리 기자 yul115@



▲이낙연 “이재명, 국회 방탄복에다 최강의 방탄복까지 입겠다는 것”
▲한 대행 “프란치스코 교황, 전 세계 신자들에게 깊은 영적 가르침과 믿음의 유산 남겼다” /사진 뉴시스

▲의사협회 찾아간 홍준표… “의대정원 문제, 해결책 찾겠다”
▲나경원 “안철수 후보의 찬탄·반탄 국민 갈라치기 분열주의에 깊은 우려”

▲한국노총 대선 개입 본격화… 정년연장, 주4일제 등 요구
▲사라진 北조용원·리일환… 국정원 “신변 변동 가능성”